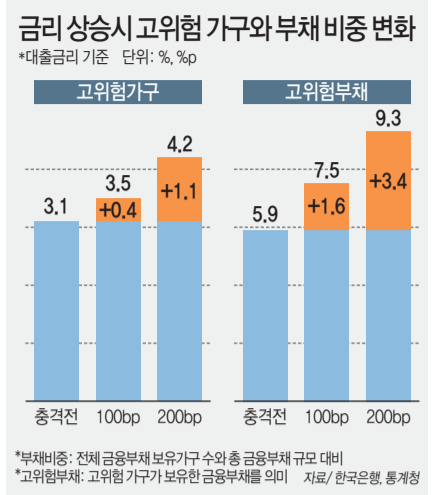


# 간극 더 벌어지는 금리단층

## 고금리 내몰리는 서민 가게

(가계-가계, 가계-기업 대출 금리 차)

금리 '1%p' 오르면 고위험가구 '3.5%'로 증가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 1.50%에 머물러  
서민들 저축은행 고금리신용대출 비율 '65.3%'



#. 1년 전 명예퇴직한 김한울 씨(51·가명). 재취업 자리를 찾아 봤지만 하루 일거리 밖에 없었다. 작은 식당이라도 해보고자 큰 맘 먹고 계약을 했다. 가게를 알아보던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주택담보대출을 잘 하면 3%대 초반(변동금리 기준)에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계약 후 계약서를 들고 은행을 찾았더니 분위기가 달라졌다. 변동금리는 잘해봐야 3%대 후반, 고정금리는 아예 처음부터 4% 중반대나 가능하다고 했다. 이마저도 "신용등급이 좋아야 한다"는 상담원의 말에 한숨이 나왔다.

리 인상 가능성을 저울질 중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합리적 신용평가 체계를 만드는 일에는 손을 놓고 쉽게 '돈놀이'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는 우리은행이 평균 3.63%다. 이외에 KEB하나은행 3.54%, 신한은행 3.55%, KB국민은행 3.49%로 3.5% 중반대 금리다. 지방은행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제주은행이 3.88%로 4%에 육박한다. 전북은행 3.81%, DGB대구은행 3.77%, 광주은행 3.78%, BNK부산은행 3.72% 등이다. BNK경남은행은 3.52%로 시중은행 수준이다. 반면 시중은행 대표상품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6월 기준 평균 1.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12개월 상품은 평균 1.75%, 24개월과 36개월은 각각 1.78%, 1.81%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도

고금리 대출 비중이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대형 저축은행의 전체 가계신용대출 중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27% 이상 28% 미만)은 65.3%였다. 지난해 말 68.1%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이다. 이처럼 저축은행이 고금리대출을 유지하면서 1분기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7.7%(1519억원) 늘어난 1조91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고금리대출 비중보다 중요한 문제는 저축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영업형태라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단층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 금리는 연 3.75%(주택담보대출 금리 3.49%)였다. 같은 분기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14.59%(5.93%)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금리 편차도 10.84%포인트나 됐다. 두 금융권의 격차는 비교 가능한 시점인 2010년 1분기 13.19%포인트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2011년 18.08%포인트까지 치솟았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높은 단층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금리 하락기에 낮아졌던 가계 부담이 다시 늘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보다는 가계를 대상으로 한 금리장사도 여전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사이 금리 편차는 5월 말 현재 6.34%포인트에 달했다. 올해 1월 7.02%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5월 기준 0.09%포인트 편차다. 2월 잠시 역전된 것을 제외하면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은행은 대출 여제를 위해 가산금리를 이전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5월 전

제 가계대출의 평균금리는 3.75%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또 한국은행이 머지않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은 더 확대되고 국내 기준금리는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bp 상승할 경우 고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3월 전체 부채가구의 3.1%(34만 6000가구)에서 3.5%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리가 200bp 상승하면 고위험가구 비중은 4.2%로 1.1%포인트 상승한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2주째 상승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나란히 연중 최고치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 당 평균 1.7원 오른 1천609.9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표시된 유가정보. /연합뉴스

# 중 성장률 1%p 하락땐 韓 수출 1.6%p 하락

중 대한 韓수출의존도 30% 근접  
중 경제성장률 둔화 연관성 커져

(중국 경제성장률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자료=현대경제연구원

| 시나리오   | 중국예상 경제성장률 | 한국 수출증가율 하락 압력 |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 |
|--------|------------|----------------|----------------|
| 시나리오 1 | 6.4%       | 0.3%p          | 0.1%p          |
| 시나리오 2 | 5.9%       | 1.1%p          | 0.3%p          |
| 시나리오 3 | 5.7%       | 1.4%p          | 0.4%p          |
| 시나리오 4 | 4.4%       | 3.9%p          | 1.2%p          |
| 시나리오 5 | 2.4%       | 8.8%p          | 2.7%p          |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한국의 경제 성장 감소폭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더 높아졌으며 최근 3개년 연평균 한국의 대중국 경수수지 흑자 규모는 전체 경수수지 흑자의 절반에 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차이나 리스크, 교역 경로를 넘어선 경제위기 전염 가능성에 대비하자'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1.6%포인트,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 요인이 생긴다"고 추정했다. 특히 중국 경제 위기가 한국으로 전염될 가능성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격화하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한국경제가 입는 피해 경로는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 경로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30%에 근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총수

출에서 대중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7%로 지난해 24.8%보다 늘었다. 이는 아세안(16.6%), 미국(11.5%), EU(9.8%), 일본(5.2%)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수출의존도가 높아 양국의 수출경기 연관성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중국은 2016년 1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추세에 있는데, 한국의 대중수출도 유사한 경로를 보인다. 투자 역시 지난해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신고기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다. 2003년에는 45.5%까지 치솟기도 했다. 2000년 이후 누적 투자 기준으로 전산업의 14.3%, 제조업은 38.3%가 중국이다. 한국의 경수수지 흑자 절반 정도는 중국과의 대외거래를 통해 얻고 있다. 2015~2017년 기간 연평균 중국 경수수지 흑자

규모는 443억6000만 달러로 전체 흑자(945억5000만 달러)의 46.9%다. 서비스수지는 연평균 223억8000만 달러 적자인데, 대중 서비스수지는 35억3000만 달러 흑자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는 중국에 대해서는 60억5000만 달러 흑자다. 한국의 외국인 여행수입 절반 이상인 54.9%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나온다. 금융시장도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은 2016년 이후 최근까지 주가흐름이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국고채금리는 2014년 이후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관찰된다. 결국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한국 역시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만약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대가 아닌 5.9%를 기록할 경우, 한국의 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양성호 기자 ysw@

# 근로시간단축 여파? "2020년까지 최대 34만명 고용 감소"

근로시간 단축으로 오는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자본 가동률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고용이 줄고 소득재분배도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오는 2019년에는 약 10만3000개, 2020년에는 약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은 고소득층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재분배 약화가 아닌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재분배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 형태별로 2020년 정규직이 13만2000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개 이상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17만2000개 감소하고 대기업의 일자리가 6만10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일차적으로 임금과 가격변화의 크기에 따라 고용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보전 압력이 커지고 시간당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호봉급 임금체계, 강성노조 등에 따라 임금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신규고용보다는 제품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기업은 시간당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려야하지만, 이 경우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우려된다. /정연우 기자 yw964@

# 올해 자동차 등록대수 2300만대 돌파 예상

인구 2.3명 당 1대 보유한 셈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에 육박했다.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1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대비 약 1.6% 증가한 2288만2035대로

집계됐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그러나 연 3%대 증가율은 유지할 전망이다. 자동차 등록대수 연간 증가율은 2015년 4.3%에서 2016년 3.9%, 작년 3.3%에 이어 올해에는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며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소비자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해 올해 말 자동차 230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산차는 2084만대(91.1%), 수입차는 204만대(8.9%)로 수입차 점유율도 꾸준히 증가했다. 수입차 점유율은 지난해 6월 8.0%에서 지난 6월 8.9%로 늘어났다.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는 39만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1.7%로 늘어났다. /채신화 기자 csh9101@